

건강한 임신과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발, 늦지 않았다

백선희 소장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3월, 한때는 찬란했던 봄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아직도 ‘땡오삼천지교’라는 말이 부모들의 뇌리에 새겨있고, 최근 화제를 낳았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학업, 성공, 행복, 모두를 넘어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의 문제는 그 모든 저출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최근 OECD가 수행한 2030 미래가족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출생률을 고려할 때 자녀가 없는 커플의 수가 2025-2030년에 놀랄 만큼 증가할 것이라 말하였고, 한국은 그 비율이 72%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에 해당된다는 수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예상치이다(OECD, 2011). 데이터에 기반 한 예측을 통하지 않더라도, 출산거부의 문화는 곳곳에서 체감된다.

최근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으로 전환으로,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한 출산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그러나 출산 환경 개선 정책은 난임시술 본인부담 추가 경감 등 난임에 대한 비용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반복되는 난임시술로 인한 부부의 우울감, 스트레스, 그로 인한 낮은 부부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에서 전국 15세 이상 남녀에게 저출산 대응 정책 중 ‘매우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임신·출산 지원정책이었고, 그 외에도 자녀돌봄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순이었다. 반면 정책효과에 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자녀돌봄지원 정책이 3점이었으며, 그 외의 정책은 2.8점대로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임신·출산 정책의 중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성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점에서 본 호의 건강한 임신·출산 관련 기획은 의미가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임신부 등록제 도입, 육아친화마을 조성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 개선에서 임신과 출산의 노력을 기울이는 난임 부부에 대한 비용 및 심리적 지원, 출산 전 후 산모신생아 돌보미나 간호사지원, 육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직접적 지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WHO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2016-2030)'으로서 16개 지표를 설정하여, 15-49세 여성의 성, 생식건강 보호, 정보, 교육을 보장하는 법과 규정을 지닌 국가의 수를 지표(SDG 5.6.2)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이 결혼한 여성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서 출발해야 하며, 저출산 극복 정책의 범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보여진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출발, 아직은 늦지 않았다. 국민들을 위한 건강권 회복, 산모의 건강지원을 통한 태내기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